



3월의 雪中梅

철모르는 봄눈과 영하의 날씨도 빽빽 물든 흥매화를 감상하려는 여심(女心)을 막지 못했다. 10일 오전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종외공원에서 흰 눈이 흥매화에 내려앉아 빛어낸 절경 속에서 담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여 제발…

### 파업 찬반투표 끝내 가결…지역경제 파국은 막아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15일까지 협상을 진전이 없으면 16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연대파업에 나서기로 해 지역경제에 파업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0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

조 지난 8~9일 실시한 창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천568명 중 3천486명이 참여해 72.34%(2천581명)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창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지침을 전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부터 작업전 안전점검 금지, 초과 근무 금지, 정시 식사 등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 결과에 성과가 없고, 회사 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오는 16일께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협상 결렬 선언 후 8일만에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협상에서 사측은 새 협상안 제시

를 요구했고, 노조는 사측에 먼저 정리하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어 오후 4시30분 지노위 1차 조정에서 다시 만났다. 이곳에서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파업이 가결되고,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금호타이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도 오는 4월1일 총파업을 선언, 연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정리하고 도급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광주본부 산하 모든 노조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금호타이어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총파업 전까지 매주 토요일 송정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파업 면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모처럼 경기회복세인 지역경제가 또다시 추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이민원(광주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위원장은 “회사가 위기를 빌미로 노조 길들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진정 회사를 걱정한다면 노사가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광주시장과 시장 후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관가 司正 비상

### 행안부·총리실·감사원 등 잇단 감찰 초긴장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기동감찰반이 F1대회 운영법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 기동감찰반이 전날 F1 경기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부터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valley Operation)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대회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이날 오전 행안부

특별감찰단 소속 직원 2명이 시청 감사관실을 방문해 공직자 선거개입과 토착비리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피고 돌아갔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공직자 줄서기와 편 가르기, 무단 자리이식 등 공직기강 해이,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 노조의 선거관여, 선거철 규제·단속업무 소홀, 민생현안 방치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 서구청사 건립과 관련, 감사원 직원 4명이 서구를 방문해 서구청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총리실 소속 감찰팀도 3~4명 단위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일선 자치단체에 상주하다시피 드나들며 집중감찰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처럼 행안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찰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척결하기 위해 지난달 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모두 9명으로 이뤄진 특별감찰단을 구성, 내부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행안부와 감사원 등 정부 감찰기관 소속원들의 지역방문이 부쩍 잣아지고 있으며, 소리없이 지역을 다녀가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감찰기관 소속원들의 방문 횟수는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총행기·김진기자 redplane@

## 정세균 “배심원제 끝까지 고집 않겠다”

### 광주 국회의원들과 회동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 국회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시민배심원제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으나 광주 국회의원들이 속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시민배심원제 50%+당원 50%’안은 당원도 시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 참여가 75%가 반영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 경선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 “EBS서 수능 70% 출제”

### 안병만 교육 밝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곡동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옥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

원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능강의나 교재에서 소개된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실제 수능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매년 영역별로 20%에서 60%까지 둘째 날뛰고, 평균 30% 안팎에 그쳤으나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그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EBS 강의와 수능시험은 직·간접적으로 매년 영역별로 80% 안팎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